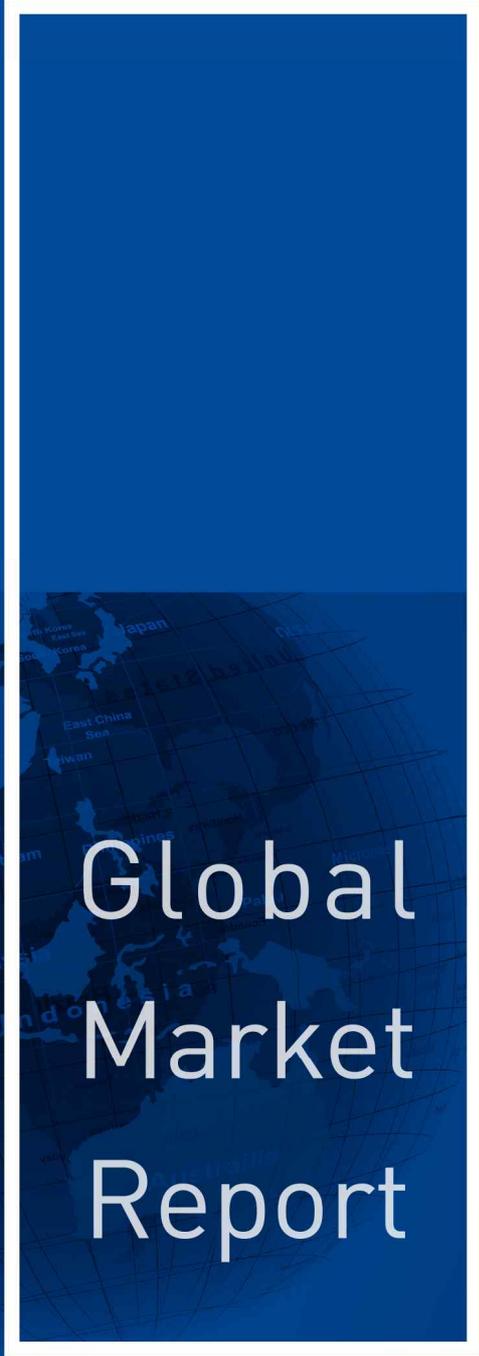


# 2019년 인도 총선결과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CONTENTS

## 목 차

### 요 약

---

I. 인도 총선결과와 의의	1
----------------	---

---

II. 인도 정부의 주요정책 전망	12
--------------------	----

---

12	1. 집권여당의 공약 주요내용
17	2. 경제산업정책 전망
21	3. 통상무역정책 전망
24	4. 투자정책 전망

III. 총선결과에 대한 기대 및 평가	26
-----------------------	----

---

IV.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30
----------------------	----

30	1. 기회 및 위협요인
32	2. 시사점

## 요 약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최된 인도 17대 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단독 과반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직전 총선에 비해 20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 여당은 이로서 국정운영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연임이 확실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로써 인도 역사상 다섯 번째로 두 번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지도자가 되었다.

2014년 총선을 통해 취임한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부정부패 척결과 기업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였고,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인도를 중국에 이은 글로벌 제조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민, 노동자 계층의 반발로 핵심 지지기반인 힌디벨트(Hindi Belt) 지역 선거에서 패배 하기도 하였으나, 인도 국민들은 그가 제시한 '강한 인도'에 지지로 화답하였다.

모디 총리는 2017년 독립기념일 기념사를 통해 'New India by 2022'를 제시하며, 가난과 부정부패, 테러리즘, 분파주의, 카스트의 다섯 가지 장애물을 극복한 현대국가 인도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22년은 인도 독립 75주년으로 금번 총선을 통해 75가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한 모디 총리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 2기에도 경제 및 사회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Next China 대안국가로 주목받는 가운데 인도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대승하며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며, 양국간 통상 개선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I 인도 총선결과와 의의

## □ 총선결과

- 2019년 인도 총선(17대 하원의원 선거)을 통해 여당 재집권
  -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7회에 걸쳐서 실시된 인도 하원의원 선거가 5월 23-24일 최종검표를 끝으로 종료되었음.
  - 투표결과 현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총 의석 542석 중 303석을 차지, 단독 과반(272석 이상)을 달성하며 압승하였으며 재집권에 성공
    - \* 2014년 대비 2019년 의석수 증감: BJP(303석, +21석), INC(52석, +8석)

< 정당별 인도 하원의석 획득결과 >

연번	NDA 계열	의석수	연번	UPA 계열	의석수
1	인도국민당(BJP)	303	1	인도국민회의당(INC)	52
2	SS	18	2	DMK	23
3	JDU	16	3	NCP	5
4	LJP	6	4	IUML	3
5	AD	2	5	기타 UPA지지	8
6	기타 NDA지지	7	소 계		91
소 계		352	-	비연합 정당	99

자료: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 NDTV (최종검색일: '19.5.26)

주: 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는 BJP(인도국민당)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계열 정당의 연합세력이며,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는 INC(인도국민회의당)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 계열 정당의 연합세력임.

- 핵심지지층 보존에 성공한 가운데, 전국적 영향력 확대
  - '18년 말 핵심 지지기반인 '힌디벨트(인도 중부)' 지역 지방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지세 재확인
  - 야당의 세력이 강했던 웨스트벵갈, 카르나타카 지역에서 의석을 새로이 추가하고, 유력 지역정당을 끌어안으며 영향력 확대

## □ 주요 지역 총선결과 및 상황

- (우타르프라데시) 543개의 선거구 중 80개를 보유해 ‘인도 정치의 1번지’로 불리며, 직전 총선에서 BJP가 71석을 석권하며 승리의 기반을 마련. 노이다市는 삼성전자 등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한 인도 산업의 중심지임.
- (구자라트) 인도 서북부에 위치한 卍로 모디총리가 2회에 걸쳐 주 총리로 재직한 정치적 고향임. 모디총리는 구자라트 경제발전 치적을 앞세워 연방총리로 취임
- (마하라슈트라) 인도 서부 산업의 중심지로 금융·문화의 도시 뭄바이와 공업 중심지 푸네가 위치함. 전통적으로 힌두교 지역정당의 세력이 강함.
- (타밀나두) 지역정당이 강세를 보이며 독특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음. 인도 남부에 위치한 산업 중심지로 현대차 등 다수의 한국기업이 위치
- (안드라프라데시) 인도 중동부에 위치한 卍로 2016년 탈렌가나 주와 분리되었으며, 기아 자동차가 2019년 초 아난다푸르 지역에 공장을 완공
- (웨스트벵갈) 인도 동부 대도시 콜카타를 주도로 하는 지역이며, 反모디 선봉장을 자처하는 마마타 바네르지(Mamta Banerjee)가 총리로 재임 중

- (우타르프라데시) 인도 정치의 1번지에서 확인된 INC의 몰락
  - 지역정당이 약진한 가운데 BJP는 의석수 상실을 최소화하였으나 INC는 보루인 아메티(Amethi) 지역구에 라홀 간디 총재가 직접 나섰음에도 BJP 후보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등 몰락하였음.
    - \* NDA: 64석(-9석), UPA: 1석(-1석), 지역정당(BSP, SP 등): 15석(+10석)
  - BJP가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원의석 또한 과반을 유지하면서, 노이다 공항 프로젝트 등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구자라트) ‘BJP의 정치적 고향이자 경제개혁의 교두보’ 지지세 재확인
  - 2014년 총선에서 쏘의석 석권 후, INC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2017년 주 의회 선거에서 INC가 약진하였으나, 금번 총선에서 26개 선거구 전석을 재확보하며 모디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지지지역임을 재확인
  - Gift City, Dholera 산업단지 등 지역내 주요 스마트시티, 신공항 및 메트로 개발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 진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

- (마하라슈트라) 지역정당과의 성공적인 연합. 안정적인 승리 획득
  - 지역정당인 ShivSena(시브세나)가 BJP와 연정을 이뤄 선거 캠페인을 함께 하였으며, 이변없이 BJP 연정이 승리하였음.
  - 구자라트의 경제수도 암다바드와 마하라슈트라 뭄바이 사이에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두 도시 사이에 걸친 공업단지 조성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됨.
- (타밀나두) 반BJP 성향, 친기업 지역정당의 승리
  - BJP와 연정을 이루고 있던 여당 AIADMK의 부정부패와 지도자 사망으로 INC와 연정을 이루고 있는 DMK가 하원의석을 장악하였음.
  - 타밀나두는 물론 케랄라 지역에 대한 중앙여당의 영향력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저조했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여당은 적극적인 기업유화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 BJP계열 의석 확보수('14/'19) : (타밀나두주) 37석 → 1석, (케랄라주) 0석 → 0석
- (안드라프라데시) 지역분리 이후 첫 총선. 중립성향 지역정당 승리
  - 2016년 탈렌가나 주와의 분리 이후 개최된 첫 총선에서, 지역정당인 YSRCP가 압승을 거두었음. 인도정치의 지역 정당화를 보여주는 사례
    - \* (YSRCP, Youth, Labour and Farmer Congress Party)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 기반 지역정당으로 또 다른 지역정당인 TDP(Telugu Desam Party)
  - 금년 4월 YSRCP의 고위간부가 진출 외국기업의 현지인 채용진행이 더디다고 지적한 바 있음. 해당지역은 기아자동차 신규 공장 소재지임.
- (웨스트벵갈) 반모디 선봉지역에서 일어난 '샤프론(BJP 정당色)' 열풍
  - 주 집권당인 TMC에 밀려난 CPI(M)의 공백을 BJP가 차지하며, 지난 총선에 비해 14석이 증가한 16석 확보. 우타르프라데시에서의 상실을 보충하였음.
  - BJP의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되어왔음. 금번 선거에서 주 집권당인 TMC와 거의 비슷한 의석을 확보한 BJP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노릴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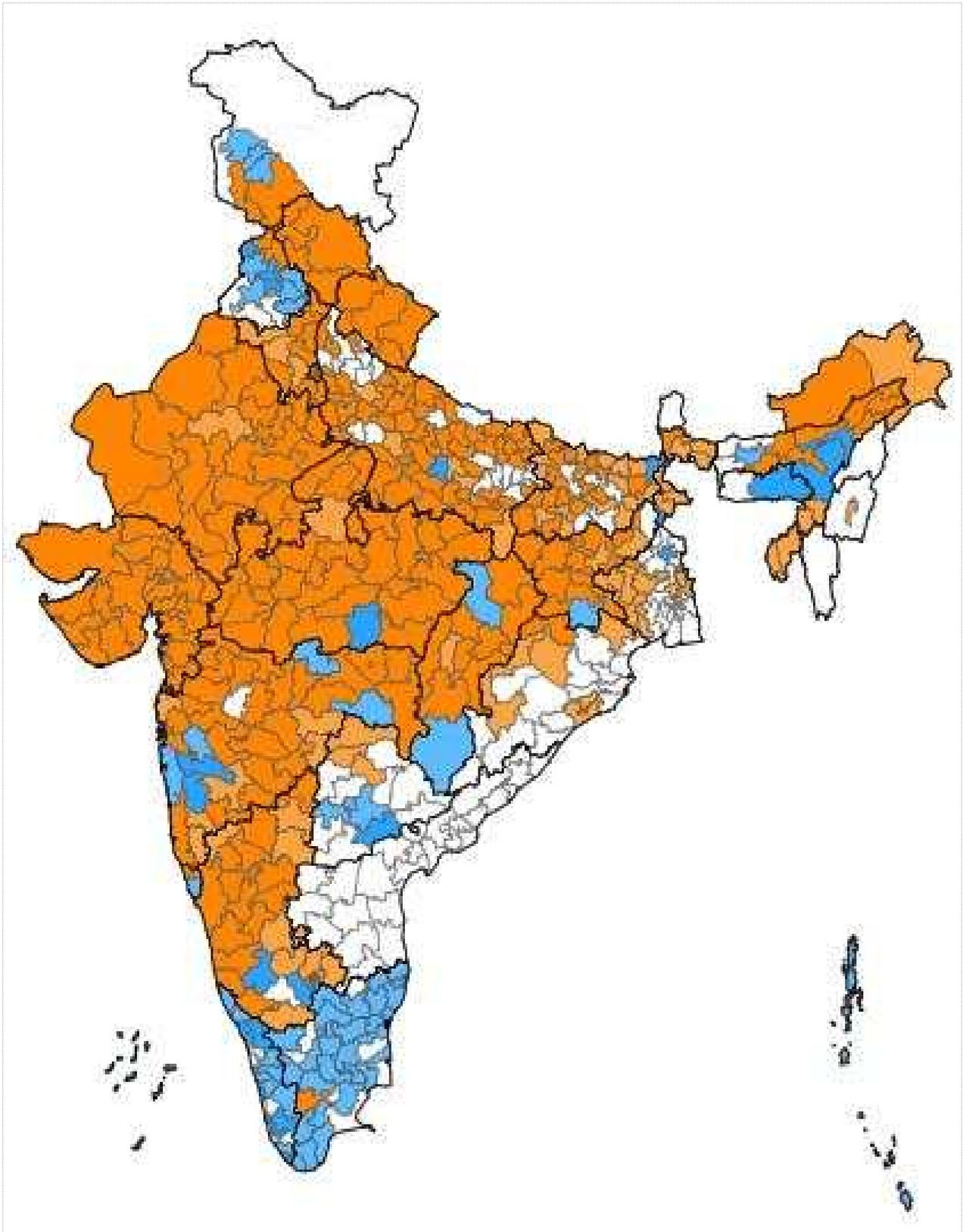
< 각 지역 정당별 의석 획득현황, 단위: 석, ()는 직전 총선대비 증감 >

지역명(의석수)	NDA	UPA	비연합
안다만&니코바르(1)	0(-1)	1(+1)	-
안드라 프라데시(25)	0(-2)	-	25(+2)
아루나찰 프라데시(2)	2(+1)	0(-1)	-
아쌘(14)	9(+2)	3(-)	2(-2)
비하르(40)	39(+9)	1(-8)	0(-1)
찬디가르(1)	1(-)	-	-
차티스가르(11)	9(-1)	2(+1)	-
다드라&나가르 하벨리(1)	0(-1)	0	1(+1)
다만&디우(1)	1(-)	-	-
델리(7)	7(-)	-	-
고아(2)	1(-1)	1(+1)	-
구자라트(26)	26(-)	-	-
하리아나(10)	10(+3)	0(-1)	0(-2)
히마찰 프라데시(4)	4(-)	-	-
잠무&카슈미르(6)	3(-)	3(+3)	0(-3)
자르칸트(14)	12(-)	2(-)	-
카르나타카(28)	26(+9)	2(-9)	-
케랄라(20)	-	18(+7)	2(-7)
락샤드웍(1)	-	-	1(-)
마디야 프라데시(29)	28(+1)	1(-1)	-
마하라슈트라(48)	41(-)	6(-1)	1(+1)
마니푸르(2)	1(+1)	0(-2)	1(+1)
메갈라야(2)	-	1(-)	1(-)
미조람(1)	-	-	1(-)
나갈랜드(1)	1(+1)	-	0(-1)
오디샤(21)	8(+7)	1(+1)	12(-8)
푸두체리(1)	0(-1)	1(+1)	-
편잡(13)	4(-2)	8(+5)	1(-3)
라자스탄(25)	25(-)	-	-
시킴(1)	-	-	1(-)
타밀나두(39)*	1(-37)	33(+33)	4(+4)
탈렐가나(17)	4(+3)	3(+1)	10(-4)
트리푸라(2)	2(+2)	-	0(-2)
우타르 프라데시(80)	64(-9)	1(-1)	15(+10)
우타르칸트(5)	5(-)	-	-
웨스트벵갈(42)	18(+16)	2(-2)	22(-14)

자료: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 NDTV (최종검색일: '19.5.26)

주: 타밀나두 1개 선거구 선거 취소

< 각 정당별 의석 획득 현황지도, NDA(주황색), UPA(하늘색), 기타정당(공백) >



자료: NDTV

## □ 총선경과

- (1단계, '18.말~'19.1월) 소외층의 반발, 지방선거 패배와 야당의 약진
  - '18년 12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과반 점유에 실패하였는데, 핵심지지 지역인 라자스탄, 마디아 프라데시에서도 정부 장악에 실패하며 인도 총선의 향방은 오리무중에 빠졌음.
  - 야당은 일자리 창출실패, 농촌지역 소외 등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며, 인디라 간디\*, 만모한 싱\*\*과 같은 지도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거 전략을 운용
    - \* 인디라 간디: 인도 초대 수상인 네루의 딸이며, '70-'80년대 두 차례 수상을 지냈음. 야당인 국민회의당 라훌 간디 총재의 조모
    - \*\* 만모한 싱: 인도 전직 총리, 전 재무장관이자 전 중앙은행 총재이며, 2004-2014년 총리로 재직하였음. 인도의 경제개방과 현대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
- (2단계, '19.2월~'19.3월) 소외계층 달래기, 힌두 민족주의 고조로 지지층 결집
  - 인도 정부는 지난 5년간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2월 초 발표된 임시 예산안을 통해 농민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등 소외 계층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 2월 중순 인도-파키스탄 접경지역 테러, 3월 발라콧(Balakot) 공습 등을 계기로 반무슬림, 힌두 민족주의가 고취되었고, 모디총리가 위성 격추 미션인 샷티(Shakti, 힘)의 성공을 브리핑하며 안보 이슈를 한층 부각하였음.
- (3단계, '19.4월~'19.5월) 7차례에 걸친 선거의 시작. 치열한 유세전
  - 인도 선관위는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지역별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543개 선거구의 유권자 9억 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모디 총리는 전체 선거구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우타르프라데시 주 바라나시에 후보인 등록을 하고, 야당의 비리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여당 대세론을 강조하였음.
  - 라훌 간디 총재가 이끄는 국민회의당은 '감시자가 도둑이다(Chowkidar Chor Hai)'라며 여당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통합간접제, 화폐개혁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혼란을 지적하였음.

< 인도 총선 주요일지 >

시기	사 건	비 고
'18.12월	인도 중부 5개 주 지방선거 실시. 중앙여당 힌디벨트 지역에서 참패	-
'19.2.1	인도정부, 2019년 임시 예산안 발표 - 농민총 보조금 지급	(2월 중순, Time of India 조사) 집권 가능성 - NDA(83.03%), UPA(9.25%), 모디총리가 없는 NDA(4.25%), 반모디 정부(3.47%)
'19.2.14	인도-파키스탄 접경 잠무&카슈미르 풀와마(Pulwama)에서 무슬림 무장단체가 버스 테러 - 인도 군인 40명 사망	-
'19.2.26 -2.27	인도 공군, 파키스탄에 위치한 테러단체 캠프 위치추정 장소인 발라콧(Balakot) 공습. 인도-파키탄 공군간 공중전 발생, 인도 조종사 생포	(2월 초, TV-CNX 조사) 예상의석수 및 직전총선대비 증감 - NDA(285석, -51석), UPA(126석, +68석), 기타(132석)
'19.3.27	모디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인 샹티(Shakti)의 성공을 발표 (세계 4번째)	(3월 말, Business World 조사) 현 여당이 재집권할 것인가? - 그렇다(64%), 아니다(26%)
'19.4.11	선거 개시, 1지역 선거 실시 (안드라프라데시, 탈렝가나 등 20개주내 지역구)	2지역(4.18), 3지역(4.23), 4지역(4.29), 5지역(5.6), 6지역(5.12), 7지역(5.19)
'19.5.23	검표 실시	-
'19.6.4	17대 하원의회 업무시작 예정일	-

자료: 현지 언론보도를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 현장 스케치 >

	
지역구인 바라나시에서 유세 중인 모디총리	INC 라훌 간디 총재의 유세
	
BJP 유세에 참가한 시민의 모습	투표소를 방문한 인도시민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촬영, Scroll.in, Deccan Chronicle 등 현지 언론보도

## □ 모디 집권 2기 주요 인물정보

○ (총리)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1950年生)

- 현 총리로 구자라트 주 총리를 지내며 이룩한 경제적  
치적을 바탕으로 2014년 총선거를 통해 총리가 되었음.
- 취임 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각종  
경제, 사회 개혁을 추진력 있게 밀어 붙였음.
- 선거 기간 중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통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New India by 2022를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경제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일부 언론은 그의 힌두중심주의적 면모를 지적하며 'Divider'라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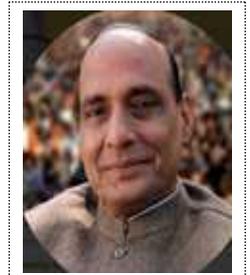
○ (재무장관) 아룬 자이트레이 (Arun Jaitley, 1952年生)

- 현 재무장관으로 모디 내각의 핵심인물이며 상원의원임.
- 1999년 BJP의 바지파이(Vajpayee) 총리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후 법무부 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음.
- 현 모디 정부에서 통합간접세 도입, 예산안 작성 등의 핵심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각종 질환으로 인해 활동이 뜸한 상황임.



○ (내무부 장관) 라즈나스 싱 (Rajnath Singh, 1951年生)

- 현 내무장관으로 우타르 프라데시 주 총리였으며, 2000  
년대 바지파이 총리 시절 내각 장관을 역임하였음
- BJP 당의 핵심간부로 2005-2009년,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당수를 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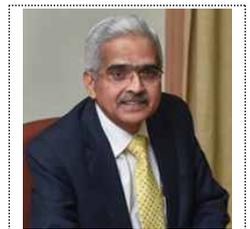
○ (국방부 장관) 니르말라 시따라만 (Nirmala Sitharaman, 1959年生)

- 현 국방부 장관으로 본래 상공부 장관으로 입각하였으나,  
2016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뒤 국방장관에 임명되었음.
- 2008년 BJP에 입당하여 대변인으로 활약하였음.



○ (중앙은행 총재) 샷티칸타 다스 (Shaktikanta Das, 1957년생)

- 2018년 12월 인도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되었으며, 관료  
출신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내며 8회에 걸쳐 연방정부  
예산안 작성에 관여하였음.



○ (상공부 장관) 수레쉬 프라부 (Suresh Prabhu, 1953年生)

- 현 상공부 장관으로 산업육성, 대외통상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본래 철도부 장관으로 입각하여 이후 철도 관련 사고가 연이어 나면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상공부로 자리를 옮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1996년 이래 마하라슈트라 선거구에서 지역정당인 시브세나(Shiv Sena)의 하원의원으로 활동해왔으나, 2014년 BJP로 당적을 옮겼음. 현재는 안드라 프라데시 상원의원임.



○ (BJP 당수) 아미트 샤 (Amit Shah, 1964年生)

- 현 BJP 당수(President)이자 선거전략가로 2014년과 2019년 총선에서 전략 수립과 실행을 이끌었으며,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 2019년 총선에서 구자라트의 州都이자 핵심선거구인 간디 나가르(Gandhi Nagar) 지역에 출마, 압도적 승리를 거둠.
- 향후, 입각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Post-Modi 핵심 정치인으로 역할과 영향력 강화 예상



○ (INC 총재) 라훌 간디 (Rahul Gandhi, 1970年生)

- 영국 식민지배 시대부터 인도 인민을 대표해온 인도 국민회의당(INC)의 총재로, 초대 수상인 자와하르랄 네루의 증손자임.
- 2017년 어머니인 소녀(Sonia) 간디의 뒤를 이어 국민회의당의 총재로 총선을 진두지휘해 왔으나, 2014년 이은 참패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INC는 전국 야당으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리게 된 상황임.



○ (안드라프라데시 총리후보) 자간모한 레디 (Y. S. Jaganmohan Reddy)

- 안드라프라데시 지역정당인 YSRCP의 창립자이자 현 대표임. 안드라프라데시 전직 총리인 라자세카르 레디의 아들
- 총선 출구조사 발표 이후 어느 중앙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당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하였음.
- 반BJP 성향인 전 안드라프라데시 총리 나라 찬드라바부 나이두의 TDP가 몰락한 가운데, YSRCP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 (타밀나두주 DMK 당수) 엠케이 스탈린 (M. K. Stalin)

- 타밀나두 지역정당인 DMK의 당수로 작년에 사망한 아버지 엠 카룬나니디를 이어 당권을 장악하고 있음. 유력한 차기 주 총리 후보이나 지역의회 장악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BJP와 연정을 이루고 있는 지역 라이벌 AIADMK와 대립하고 있으며, INC를 지지하고 있음.
- 아버지가 집권하던 시기 현대자동차가 타밀나두 주에 진출하였으며,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음.



○ (웨스트벵갈주 총리) 마마타 바네르지 (Mamta Banerjee)

- 동부 웨스트벵갈 현직 주 총리로 타타 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2011년부터 장기 집권 중임
- 인도 총리직에 대한 야심으로 反모디 선봉 정치인으로 사사건건 모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음
- 금번 선거에서 BJP가 웨스트벵갈 지역에서 선전하면서 정치적 고립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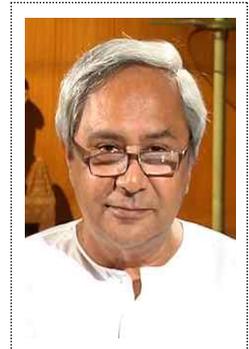
○ (비하르주 총리) 니티쉬 쿠마르 (Nitish Kumar)

- 북동부 비하르 현직 주 총리로 과거 중앙정부 철도부, 농업부,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였음.
-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비하르를 지난 10년간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의 하나로 변모시킴.
- 금번 선거에서 BJP와 연합하여 INC를 지지하는 지역정당 RJD의 랄루 프라사드 야다브와 경쟁하였으며 대승을 거두었음.



○ (오디샤주 총리) 나빈 파트나익 (Naveen Patnaik)

- 동부 오디샤 현직 주총리로 반부패, 빈곤척결 등의 정책으로 인기를 얻어 4회 연속 주 총리로 선출되었음.
- 대표 낙후지역인 오디샤를 경제개발의 모범사례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총선에서 승리하는 중앙당과 연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



## □ 총선 총평

- 2014년의 대승을 기반으로 한 지지세 확대전략의 승리
  - 2014년 총선에서 BJP는 282석을 차지하며 단독과반을 차지하였음. 이에 비해, 야당인 INC가 44석에 그치면서 사실상 금번 총선에서 직전 총선에서 벌어진 의석수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획득 의석수에 비해 낮았던 지지율(31%)과 협소한 우호범위를 만회하기 위해 BJP는 집권 이후 주요 지역 지방선거에서 주 정부를 장악해 나가며 지지기반을 확대하였고, 우타르프라데시 등에서 빼앗긴 의석수를 웨스트 벵갈, 카르나타카 등 야당의 세력이 강했던 지역에서 만회하는데 성공
- 안보이슈 부각과 네셔널리즘
  - 모디 정부는 2월 접경지역 테러사건에 대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키스탄 국경지대를 공중 폭격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음. 여당은 모디 총리를 담대한 심장('Man with 56-inch Chest')이라 표현하며, 안보이슈 부각을 통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함.
  - 야당은 지지부진한 라팔 전투기 도입사업과 이와 관련된 일부 기업가에 대한 정부측의 특혜제공 이슈를 제기하였으나, 핵심이 된 안보이슈에서 뚜렷한 대항논리를 내놓지 못하였음.
- 집권세력 반대성향을 성공적으로 뿌리친 청렴 이미지
  - 반복되는 권력층 부정부패에 지친 인도 유권자들은 뚜렷한 집권세력 반대 (Anti-Incumbency) 성향을 보여 왔으며, 금번 총선에도 야당은 '감시자(모디)가 도둑이다(Chowkidar Chor Hai)'라며 유권자들에게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설교하였음.
  - 이에, 여당은 야당의 핵심 지도층인 간디 가문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였고, 대를 이어 집권해온 간디 가문에 비해 한미한 카스트 출신이자 미혼인 모디 총리의 청렴함을 내세워 부패 이슈를 성공적으로 몰아내었음.

## II

# 인도 정부의 주요정책 전망

### 1. 집권여당(BJP)의 공약 주요내용

#### □ 새로운 인도 건설의 청사진 제시

##### ○ BJP의 공약 발표

- BJP 공약집은 1차 투표일 직전인 4월 8일 발표되었으며, 모디총리, BJP 당수의 인사말과 국정과제 및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공약발표회에서 모디 총리는 ‘연임하는 정부가 내놓는 최초의 공약’이 될 것이 말하며, 연임 자신감을 비치는 동시에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강조

< BJP의 공약 발표 >



자료: the Wire, Opindia.com 등 현지 언론보도

##### ○ ‘강한 인도’ 2022년까지 새로운 인도 건설

- 공약집의 표제는 ‘Sankalp Bharat, Sashakt Bharat(여러분에게 강한 인도를 약속합니다)’로 지난 총선에 비해 안보 이슈를 강조
  - \* 2014년 : Sabka Saath Sabka Vikas(총체적 노력과 내생적 성장)의 구호 아래, 물가 안정, 고용창출, 정부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6대 당면과제를 제시
-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이 50년 동안 이어진 왕조적 지배(Dynastic Rule)로 발생한 결핍을 채우는 유권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하며, 2019년 총선을 통해 2022년까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인도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 현 야당인 INC가 1947년 독립 이래 집권한 기간은 54년 7일에 이르며, 2022년은 인도독립 75주년임.

## □ 개혁정책 지속 및 구체적인 정책목표 제시

### ○ 12개 국정과제 75가지 정책목표

- 안보를 강조한 가운데 소외계층을 의식한 농가 소득 증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투자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음.
- 장기적으로 세계 3위 경제권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창업 생태계 활성화, 조세, 금융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 BJP 공약집(Sankalp Patra) 주요 내용 >

구 분	세부내용
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디총리, ‘13억의 꿈을 위한 새로운 인도’) 2014년 취임당시 취약 5개국(Fragile Five)로 취급받았던 인도가 지난 5년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1기 임기동안의 치적을 자세히 설명하였음. 2014년 총선이 50년 간의 왕조적 지배(Dynastic Rule)로 인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유권자의 결심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독립 75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이 포함된 향후 5년을 결정하는 금번 총선에 지지를 요청</li> <li>- (아미트 샤 당수) 부정부패와 정부의 투명치 못한 행정과 같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하며, 2019년 총선은 발전, 좋은 거버넌스, 번영을 추구하는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평가</li> </ul>
12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보상의 국가 우선주의 (Nation First)</li> <li>2) 농민소득 증가 (Doubling Farmers' Income)</li> <li>3) 세계 3위 경제권 이룩 (India as the World's 3rd Largest Economy)</li> <li>4) 인프라 구축 (Infrastructure)</li> <li>5) 건강한 인도 (Healthy India - Determined India)</li> <li>6) 일하는 정부 (Good Governance)</li> <li>7) 젊은 인도 (Yuva Bharat - Tomorrow's India)</li> <li>8) 교육제도 개선 (Education for All)</li> <li>9) 여성지원 (Women Empowerment)</li> <li>10) 내재적 성장 (Inclusive Development)</li> <li>11) 문화재 보호 (Cultural Heritage)</li> <li>12) 대외 정책 (Foreign Policy)</li> </ol>
75개 목표	농업분야(1-12), 교육(13-19), 인프라(20-36), 철도(37-41), 보건(42-48), 경제(49-56), 거버넌스(57-64), 내생적 성장(65-70), 여성(71-72), 문화유산(73-75)

자료: BJP 총선공약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정리

< 참고자료 - 인도국민당(BJP) 선거 공약(Manifesto) >

**표제 : "Sankalpit Bharat, Sashakt Bharat" (여러분에게 강한 인도를 약속합니다)**

- 안보상의 국가우선주의 (Nation First)
  - 테러리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군의 현대화를 통해 군사력을 확충하는 한편, 'Make in India in Defense'를 통해 국방장비의 국산화를 추진
  - 불법이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등록제도(National Register of Citizens)의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고,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경안보를 강화
  -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개발과 평화유지를 위하여 헌법 370조항과 35A 조항\*의 폐지를 추진
    - \* 주: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거주이전 및 투자를 제한하고, 제한적인 법적자치를 허용하는 조항임.
- 농민소득 증가 (Doubling Farmers' Income)
  - 2헥타르 이하 소유 농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유지,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60세 이상 소농에 대한 연금제도를 도입
  -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하여 25조 루피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고, 10만 루피 한도의 저금리 단기농업대출 제도를 도입
  - 오일시드(Oilseed)를 비롯한 농작물의 자급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전국에 농작물 창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장을 확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68개의 관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2019년 12월까지 완료
- 세계 3위 경제권 이룩 (India as the World's 3rd Largest Economy)
  - 2025년까지 GDP 5조 달러, 2032년까지 10조 달러를 목표로 하며, 고성장, 저물가,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
  -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향상시키고, 확충된 조세를 기반으로 빈민지원, 인프라 개선 확대. 통합간접세를 단순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지속
  - 2024년까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0조 루피의 자본투자를 집행하며, 물가 안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자본조달 비용을 절감
  - 인도를 세계 제조업 허브로 만들기('Making India a Global Manufacturing Hub') 위하여, 1) 세계은행의 기업용이성 평가의 순위를 50위까지 끌어올리고, 2) 회사법(Company Act) 개정으로 기존 형사소송 대상이었던 사항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변경하고, 3) 인공지능, 전기차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정책을 발안하고, 4) 산업 클러스터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부여, 공공조달을 확대할 예정
  -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을 2024년까지 1조 루피까지 확대하고 전국에 150개의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로봇, IoT, 가상현실, 블록체인, 품질관리 등의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향상
  -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와 관련된 소요시간을 줄이며, 도시지역에 100개의 혁신구역 설립하고 2024년까지 500개의 인큐베이터와 액셀레이터를 설립. 각 부처, 지방정부에 창업지원과 관련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을 촉진함. 이로서 2024년까지 신규 창업기업 5만개 달성
  -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신고제도, 신규 검사기술 도입 등을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자에 대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실시

## ○ 인프라 구축 (Infrastructure)

- 공항, 고속도로, 가스설비, 수자원 설비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강화함.
- Urban Mobility Mission을 론칭하여 도시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함. 아울러,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 운송수단이 민간 사업자의 운송수단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수단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 향후 5년 동안 50개 도시에 지하철을 도입
- Clean India(Swachh Bharat Mission) 정책을 지속, 확대하여 모든 마을 단위에 수질 관리 인프라를 도입하고, 물관리 부처(Ministry of Water)를 신설하여 국가단위의 수자원 관리를 실시함.
- 향후 5년간 60,000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총 연장을 현재의 2배로 확장. Bharatmala 프로젝트의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를 실시하며, 지방정부의 지선도로 확충을 지원. 전기차 보급을 위하여 1천억 루피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친환경, 배터리 구동 차량개발
- 2022년까지 철도 궤간의 확장과 철로의 전력구동화를 완료하고, Vande Bharat Express와 같은 초고속, 고속철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함. 아울러, 2022년까지 철도역사에 Wi-Fi 도입
- 현재 101개의 공항을 향후 5년 동안 두 배로 확충
- 연안 해운개발 프로젝트인 Sagarmala 정책을 지속하며, 향후 5년 동안 항만 물류 처리용량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 연안 도시간, 연안 운송수단간, 연안지역의 산업화를 통합하고, 내륙수로와 수로-철도간 연동을 증진
- 24시간 7주 사용가능한 전력을 확보하고 모든 마을 단위에 전기가 보급 되도록 노력함.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75GW를 달성
- 2022년까지 모든 마을단위(Gram Panchayat)까지 광섬유 인프라를 구축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

## ○ 건강한 인도 (Healthy India - Determined India)

- 1억 가구에게 연간 50만 루피의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Pradhan MAnti Jan Arogya Yojana 정책을 지속하고, 2022년까지 15만개의 건강관리 센터를 설립
- 2024년까지 1개 행정구역(District)마다 1개의 의과 대학을 설립하고 의과 대학 졸업자 수를 두 배로 확대

## ○ 일하는 정부 (Good Governance)

- 현재 개최시기가 제각각인 중앙 하원, 주 정부, 지역단위 선거를 동시에 실시
-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부행정을 실현하고, '최소 정부와 최대의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를 지속 추진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
- 식민지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찰 행정을 쇄신하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확대. 인도를 국제 중재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Authority를 개설하여 국제금융 서비스를 개선
- 연방주의(Federalism)를 강화하여 정책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를 확대
- 과학기술 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Language Translation Mission을 통해 영문으로 쓰인 과학기술 및 인문학 관련 자료를 번역하여 접근성을 확장
- 위성격추 미션인 Shakti의 성공에 기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인 Gaganyaan을 추진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

- 젊은 인도 (Yuva Bharat - Tomorrow's India)
  - 젊은 사업가 양성을 위하여 청년사업가에게 최대 500만 루피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도시 행정기구에 광범위한 인턴십을 제공
  -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National Sports Education Board를 구성
- 교육제도 개선 (Education for All)
  - 재능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Prime Minister Innovative Learning Program을 신설하여 1년간 집체교육을 실시. 교육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National Institutes of Teacher's Training을 신설하고 4년 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법학, 공학, 과학 및 경영관련 고등교육기관을 향후 5년간 50% 확대하고 동시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확대함.
  - Study in India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의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하고, National Digital Library of India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무료의 전자책과 각종 논문자료를 제공
  - National Policy for Reskilling and Upskilling을 통해 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여성지원 (Women Empowerment)
  - Beti Bachao, Beti Padhao(우리의 딸들에게 교육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성의 교육 접근성을 지속 개선하고, 여성에 대한 금융 및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
  -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50% 이상의 여성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 조달의 10%를 할당
- 내재적 성장 (Inclusive Development)
  - 지정부족, 지정카스트, 낙후계층에 대한 정부 일자리 제공, 고등교육 기회 할당 등의 사회적 지원 지속하고, 향후 5년 내에 빈곤선 이하 가구의 비중을 한 자리수로 개선하고 현재 8억 명에게 주어지고 있는 식량지원에 설탕을 추가 지원
  - 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인교 및 배화교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 지난 5년간 42% 인상된 국가 최저임금의 인상 기초를 유지하고, 연금 대상자를 확대
- 문화재 보호 (Cultural Heritage)
  - 아요디아에 위치한 람(Ram) 사원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
  - 매년 6월 21일 개최되는 세계 요가의 날을 지속 개최하고 확대
- 대외 정책 (Foreign Policy)
  - Vasudhaiva Kutumbakam(세계는 하나의 가족이다)의 정신에 따라 우호국 및 인접국과 발전(Progress),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안보(Security)를 추구
  - 우주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Space Technology Alliance를 구축 노력
  - Bharat Gaurav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동포와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
  -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지하며,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의 안에 기초한 Comity of Nations Against International Terrorism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
  - UN, G20, BRICS, SCO(상하이 협력기구), 영연방 등을 통해 테러리즘과 부정부패 등의 이슈에 협력할 것이며, RIC(Russia-India-China), JAI (Japan-America-India) 공조를 강화할 것임. 인접국 우선(Neighbourhood First) 정책에 기초하여 BIMSTEC(벵골만협의체) 등을 통한 역내 협력을 확대. 동방정책(Act East), 아세안과의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적, 내재적 번영과 안보를 추진
  - UN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

자료: 인도국민당(BJP) 선거공약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발췌 및 번역

## 2. 경제·산업정책 전망

### □ Make in India

○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 추진현황

- 2014년 9월 모디총리는 제조업 진흥, 수출중심 성장전략인 Make in India를 내세우며, 25개 중점 산업분야 지정,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음.
- 2014-18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228억 달러로 2000년 4월 이래 누적액의 41%를 차지하였으며, 동기간 인도는 세계은행의 사업 용이성 평가(Easy Doing Business)에서 65계단 뛰어오르는 성과를 내었음.
  - \* 대인도 FDI유입(UNCTAD, '18) : ('13) 281억\$ → ('15) 440억\$ → ('16) 444억\$ → ('17) 399억\$
  - \* 사업용이성 평가 순위(WB) : ('14) 142위 → ('17) 100위 → ('18) 77위 (중국: 46위)

< Make in India 25개 중점 육성 산업 분야 >



자료: <http://www.makeinindia.com/sectors> (최종검색일: '19.05.21)

○ 향후 정책 전망

- 인도정부는 제조업의 GDP기여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나, 2017-18 회계연도 기준 16.7%에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주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초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2.0의 청사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산업군을 제시하였으며, 여당은 2019년 선거 공약에서 인공지능과 전기차를 미래 산업으로 언급
  - \* Make in India 2.0 산업군: 자본재(Capital Goods), 자동차(Auto), 방산(Defense), 의약(Pharma), 신재생(Renewable Energy), 바이오(Biotechnology), 화학(Chemical), 반도체 디자인 및 제조 (Electronic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가죽(Leather), 섬유(Textile),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귀금속(Gems&Jewellery), 건축(Construction), 조선(Shipping), 철도(Railways)
- 인도정부는 세계은행 사업용이성 평가 순위를 5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수용, 노동법 개정 등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코멘트 >

- 마힌드라(Mahindra&Mahindra) 회장(CEO&MD) Pawan Goenka
- “(기업가들은) 대중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한다. 향후 5년은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일하는 황금기가 될 수가 있다. 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직전 수 개월 동안 벗어버린 소비 사이클을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발표될 예산안이 이 점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 □ New India by 2022

- 선언의 배경과 관련 현황
  - ‘New India by 2022’는 2017년 8월 독립기념일 기념사에서 모디 총리가 최초 언급한 것으로, 75년 전인 1942년 영국의 지배를 부정하는 ‘Quit India’ 운동처럼 독립 75주년인 2022년까지 새로운 인도를 건설하자는 선언임.
    - \* 구체적으로 가난(Poverty), 부정부패(Corruption), 테러리즘(Terrorism), 분파주의(Communalism), 카스트(Casteism)의 다섯 가지 장애물을 극복한 현대국가 인도 지향
  - 이후, 2018년 12월 재무장관이 2022년까지 GDP 4조 달러 달성을 언급하였고, 2019년 총선 공약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 75가지 정책목표를 2022년까지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음.

○ New India by 2022의 세부내용

- 인도 국가개조위원회(Niti Aayog)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총선 공약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New India by 2022년 달성 액션플랜 >

부 문	세부내용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까지 GDP 4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연 7-8%의 성장률을 2022년까지 연 9%대로 끌어올림.</li> <li>- 2022년까지 현재의 총 고정자본형성을 GDP 대비 29%에서 36%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현 GDP대비 4%에서 7%로 상향</li> <li>- 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동법의 개정을 반드시 완료</li> </ul>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향후 5년간 60,000km의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2022년까지 총 연장을 현재의 2배로 확장</li> <li>- (철도) 철도 궤간 확장 및 전력구동화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초고속, 고속 철도를 확충. 전역사에 Wi-Fi 도입</li> <li>- (공항) 현재 101개의 공항을 2022년까지 2배로 확충</li> <li>- (해운) 2022년까지 항만의 물류 처리용량을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고 연안수로, 내륙수로 개선 및 철도 등 내륙운송 수단과의 연동 확대</li> <li>- (통신) 2022년까지 25만개의 마을단위(Gram Panchayat)에 광섬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li> </ul>
보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건 구축계획인 Ayushman Bharat 정책을 안착시키고, 2022년까지 전국에 15만 개의 보건센터를 설립을 완료</li> <li>- 법학, 공학, 과학 및 경영 분야 고등교육기관을 2022년까지 50%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강화</li> </ul>
공공행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정부와 최대의 거버넌스(Minimum Government and Maximum Governance)’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개선</li> <li>- Clean India 프로젝트를 수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li> </ul>

자료: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BJP 총선공약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 코멘트 >

- 고드레지 그룹(Godrej Group) 회장(Chairman) Adi Godrej
- “NDA가 재집권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다.”
- “GDP 성장이야 말로 정부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입이 증가하며 지출여력이 생긴다.”
-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과거 공언을 하였지만 오직 소기업에게만 조치가 이루어졌다.”



## □ 스타트업 인디아

- 2016년 이래 총리 주도 Startup India 정책 운영
  - 모디 총리는 2016년 초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을 직접 론칭하였으며, 국가투자유지 기관인 Invest India 산하에 전담팀을 구성하였음.
  - Invest Indi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 내 기업가치 십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은 14개로 세계 3위권이며, 2014년 이래 인도 스타트업이 유치한 누적 투자액은 323억 달러에 이룸.
-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및 지원실시
  - 인도정부는 2016년 재정법(the Finance Act)을 개정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기간에 법인으로 등록된 스타트업 기업에게 최초 창업 기간 5년 중 3년 치의 법인세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최초 7년으로 확대하였음.
  - 스타트업 인디아 국가포털을 통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외국인의 벤처자본 투자 한도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2024년까지 창업기업 5만개 추가 육성
  - BJP는 공약집을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 각 도시에 100개의 혁신구역을 지정하고 2024년까지 500여개의 인큐베이터와 액셀레이터를 설립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창업관련 평가를 도입하여 창업기업 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임.

### < 인터뷰 >

- Invest India 사장(CEO&MD) Deepak Bagla
- “인도 정부의 주력 정책인 Startup India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대규모 고용 기회를 창출 할 스타트업과 혁신을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도 정부는 혁신과 디자인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3. 통상·무역정책 전망

#### □ 인도의 대외통상정책

##### ○ 수출진흥 및 경제영토 확대

- 인도정부는 2015년 4월 대외무역정책(FTP) 2015-20를 발표하였는데, Make in India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을 적극 진흥하여 2020년까지 상품, 서비스 수출 9,0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내용임.
- 인도는 남아시아(2004), 아세안(2009), 한국(2009), 일본(2011)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외에도 이스라엘, 호주 등과 양자 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와 무역역조

-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7년 이래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세계경제 회복과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진흥 정책에 힘입어 상품 수출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무역역조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임.

< 인도의 지난 4년간 상품+서비스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 >

구 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수 출*	417,428	436,535	478,288	483,758
상 품	262,292	275,852	303,526	329,490
서비스*	155,136	160,683	174,762	186,816
수 입*	466,725	479,826	570,793	584,638
상 품	381,008	384,357	465,581	513,086
서비스*	85,717	95,469	105,212	14,992
수 지*	-49,297	-43,291	-92,505	-100,880
상 품	-118,716	-108,505	-162,055	-183,596
서비스*	69,419	65,214	69,550	71,824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GD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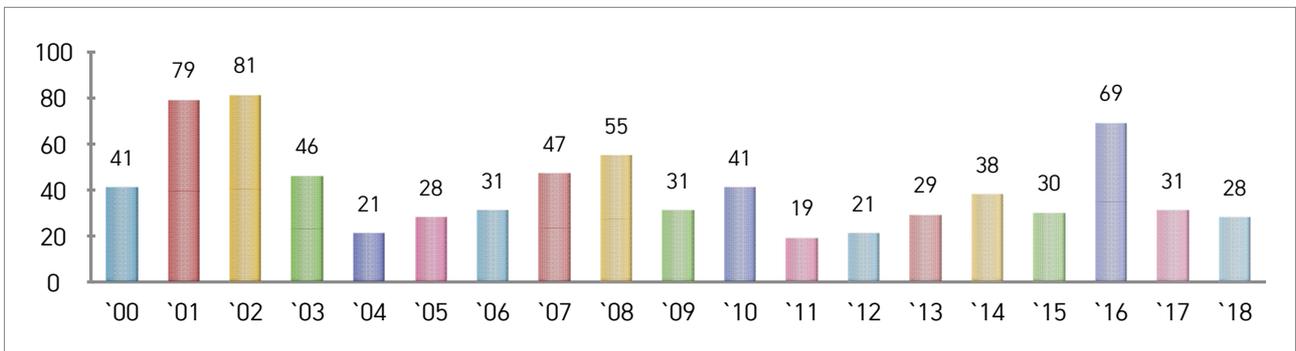
주: 2018-19 회계연도 서비스/상품+서비스 수출, 수입액은 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까지

##### ○ 수출진흥정책 및 대외 경제교류 확대 추진

- 인도 정부는 2017년 대외무역정책의 중간리뷰를 실시하여, 통합간접세 제도도입에 맞추어 수출지원 정책을 조정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하였음. 향후 수출 지원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아프리카, 중동, 아세안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도 적극 늘려가고 있음. 이에, 인도를 생산거점으로 한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으로 남아시아 역내 교류 확대는 당분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높아져 가는 관세/비관세 장벽. 자국산업 보호와 직접투자 유도 경향 강화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며, Modi 정부 들어 예년보다 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화학, 철강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무역구제 조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 \* 2010-2018년 기간 품목별 반덤핑 조사/부과건수(WTO): 화학(146/134건), 플라스틱(42/28건), 철강(37/37건), 기계(24/21건), 섬유(28/13건) 등

< 인도의 연도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



자료: 인도 상공부, WTO 자료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 2018년말 기준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건수는 총 26건에 이르며, 화학, 철강에 집중. 전기전자 품목을 중심으로 2017년 7월 이후 꾸준히 관세를 상향하고 있으며 인증 대상물품을 확대하고 있음.

<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비관세 의무 부과현황 >

품 목	세부내용
전기전자	- 정부정책(PMP)에 따라 전기전자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지속 인상 * 정책목표: FY19(PCBA, 카메라 모듈 등), FY20(터치패널 등) - 주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BIS(인도표준국) 인증 강화 및 확대
철 강	- 냉연강판, 열연후판 등 7개 품목에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중 - 2018년 6월 자동차용 철강제품에 대한 BIS 인증 의무화
화 학	- TDI, 에틸헥사놀 등 11개 품목에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중 - 2018년 일부 화학품목에 대한 BIS 인증 의무화

자료: 인도 전기전자통신부, 표준국(BIS), 반덤핑총국, 세이프가드 총국 등

□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 2010년 발표 이래 한-인도 경제교류 확대에 공헌
  -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되었으며 인도 입장에서는 OECD 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 2009년 121억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액은 2018년 215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수출은 80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2배 증가

< 한·인도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출	금 액	80.1	114.4	126.5	127.8	120.2	115.9	150.5	156.1
	증가율	-10.7	42.7	10.7	12.4	-5.9	-3.6	29.8	3.7
수 입	금 액	41.4	56.7	78.9	52.7	42.3	41.8	49.4	58.8
	증가율	-37.1	37.0	39.1	-14.7	-19.6	-1.2	18.1	19.0
무 역 수 지		38.7	57.7	47.6	75.1	70.7	74.1	101.0	97.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아울러, 대인도 투자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18년 9월까지 송금 기준 57.1억 달러가 인도에 투자되었음. 2018년 기아차의 인도진출과 삼성전자의 설비증설로 대인도 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음.
- 무역수지 불균형과 개선협상에 대한 인도측의 소극적인 태도
  -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2017년 기준 100억 달러로 협정체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 1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협정 개정에 따른 무역불균형 심화를 우려
  - 2018년 7월 정상방인 이후 양국은 CEPA 개선협상의 조기수확에 동의한 상황으로, 향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4. 투자정책 전망

#####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지속

- 2014년 이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
  - 인도정부는 2017년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왔던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를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 포털(FIIP)을 개설하며 개방의 수준을 한층 높였음.
  - 모디 정부는 2015년 건설 등 15개 산업분야의 투자규제를 완화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인도 투자허들을 낮추어 왔으며, 최근에는 유통분야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기업환경개선과 사상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모디총리는 재임기간 중 세계은행의 사업 용이성 평가(Easy Doing Business)에서 인도의 순위를 50위까지 올려놓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5년 142위에 머물렀던 인도는 2019년 77위에 위치하였음.
  - 이외, 국가투자유치 기관인 Invest India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고 총리가 직접 현지 투자IR을 진행한 결과, 연평균 4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음.

< 주요국가와 인도의 FDI 유입현황, 단위 : 백만\$ >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세계	1,425,377	1,338,532	1,921,306	1,867,533	1,429,807
<b>인도</b>	<b>28,199</b>	<b>34,582</b>	<b>44,064</b>	<b>44,486</b>	<b>39,916</b>
미국	201,393	201,734	465,765	457,126	275,381
중국	123,911	128,500	135,610	133,700	136,320
베트남	8,900	9,200	11,800	12,600	14,100

자료 : UNCTAD(2018)

< 인도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사례 >



2015년 하노버 국제박람회 모디총리 국가IR



2016년 Invest India 한국기업 전용데스크 개소

자료: IBG News, babus of India 등 현지언론보도

○ 핵심 경제개혁 법안개정 시도

- 통합간접세가 2017년 7월 성공적으로 도입되면서 인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 간 거래시 세제상의 장애물이 사라지며 기업환경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향후 주목되는 경제개혁 법안은 토지수용법과 노동법의 개정으로, 까다로운 토지수용 절차로 인하여 인프라의 구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 노동관련 법규만 44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이를 4개로 축소한다는 입장이며, 선거 승리를 동력으로 양대 개혁법안의 입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뷰 >

○ KPMG India 한국데스크 조상용 회계사

○ “인도총선이 종료되고 여당의 재집권이 거의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개혁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연임을 하게 할 경우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모디 정부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므로 집권 2기에는 보다 인도 법령에 맞는 기업운영에 주의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총선 이후 주요 일정 >

- 5월 23-24일 : 인도 17대 하원의원 총선거 결과발표
- 5월 24일 : 인도 선관위, BJP 단독과반 공표 내각, 16대 하원임기 종료(해산) 권고
- 5월 24일 : 인도 대통령, BJP 주요인사 대통령궁 초청 및 16대 하원 종료 선언
- 5월 25일 : 인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를 총리로 지명 및 정부구성 요청
- 5월 30일(잠정) : 모디 총리 및 신정부 내각구성원, 대통령 궁에서 서언(Swearing) 실시
- 7월(잠정) : 제17대 국회 몬순(Monsoon)회기시 신정부 첫 예산안 발표
  - \* 몬순회기 이전 별도 회기를 구성하여 예산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음.
- 8월 15일 : 모디 총리 독립기념일 시정 연설 진행

### III 인도 총선결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

#### □ 인도 국내외 반응

##### ○ 인도 국내의 반응

- (여당) 예상을 넘어선 성과에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이며, 개표(5.23) 당일 오후 3시경 모디 총리는 선관위의 공식 결과발표 이전에 '인도가 승리했다'라는 트윗을 업로드 하였음. BJP는 오후 6시 전국의 선거관련 당원을 뉴델리로 소집하여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당수가 선거 승리를 선언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 (야당) 선거패배의 충격에 휩싸인 INC는 라홀 간디 총재가 직접 언론 인터뷰를 가지고 선거 패배를 인정하였으며, 라홀 간디 총재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19년 인도 총선결과 관련 현지 반응 >



자료: NDTV 뉴스화면 캡처

##### ○ 인도 국외의 반응

- (각국) BJP의 승리로 모디의 재집권이 확실해지자 러시아, 프랑스 등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왔으며,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 또한 재임 축하와 함께 상호 평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왔음.
- (BBC) 'Modi Dedicates Victory to Indians' 금번 총선의 BJP의 승리에 모디 총리의 역할이 컸음을 평가하고 '인도의 승리'라는 모디총리의 발언을 소개
- (워싱턴포스트) 금번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압승(Landslide Victory)했다고 전하며, 모디 총리가 제시한 강하고 힘센 인도의 비전에 유권자들이 화답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 산업별 인도정부 정책 전망 및 업계평가

산업 부문	정부의 정책	전문가 및 업계 평가	기상도 (0-5점)
제조업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ke in India, 수출진흥 정책 등 인도의 세계 제조업 허브화 목표</li> <li>- 사업용이성 평가 50위 목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ke in India 2.0 등 기존의 제조업 부흥정책을 보다 강화</li> <li>- 모디2기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해 회사법 및 소득세법 개정이 예상되며, 컴플라이언스 이슈 부각</li> </ul>	 (4점)
전기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전기전자 순수입 제로 목표로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LCD 등 주요 전기전자 품목의 현지생산 장려를 위한 관세인상 정책 지속</li> </ul>	 (3점)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ke in India 핵심산업으로 AMP (Automotive Mission Plan) 2026 계획 하에 적극 진흥</li> <li>- 인도 중공업부의 NEMMP(National Electronic Mobility Mission Plan) 2020 계획 하에 전기차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li> <li>- 전기차량 지원제도가 현지기업에만 유리한 측면이 있어 대책이 필요</li> </ul>	 (3점)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Steel Policy에 따라 철강 제품의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있음.</li> <li>- 자동차용 고품질 철강의 인도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BIS 등 관련 품질인증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철강제품의 국내 생산을 위하여 철강분야 외국인 해외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li> <li>-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는 유지 예상</li> </ul>	 (3점)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성장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관개시절 정비사업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화학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li> <li>- 화학제품에 대한 BIS 인증대상 확대 예상</li> </ul>	 (4점)
전력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까지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175GW 달성 목표</li> <li>- 석탄화력발전을 천연가스 및 원자력으로 대체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자스탄, 구자라트 등 여당 핵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전망</li> </ul>	 (4점)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정부는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소규모 소매점과 자국 유통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권여당의 Digital India 정책에 따라 온라인 거래와 전자결제 범위가 확대되어 전자상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li> <li>- 라이선스가 전자상거래 진출을 준비 중이며, 플랫폼간 경쟁심화 예상</li> </ul>	 (3점)
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은 Make in India 2.0의 10대 중점사업의 하나임. 모디 정부 출범이후 국방비가 꾸준히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국방력은 지난 5년 간의 지속적인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평가. 지속적인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li> </ul>	 (4점)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은 2월과 4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li> <li>- 전국민 통장갯기 정책으로 통장 보급률 획기적 개선 ('14)53%→('18)8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구조 조정 지속</li> <li>- 모디 정부들어 금융권의 투명도가 개선되었으며, 농민 다수가 계좌를 보유하게 되어 풀뿌리 차원 개발 가속화</li> </ul>	 (3점)

자료: 현지 언론보도, 기업인터뷰 등으로부터 KOTRA 인도지역 무역관 종합

## □ 인도진출 기업의 반응

분야	인터뷰 내용
경제산업 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코트렐, 집진장치) “인도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재집권이 기업입장에서는 바람직” “현 정권의 통합간접세,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 등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함. 일부 정책은 물품의 현지조달을 강제하기에 제품수준이 낮더라도 인도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li> <li>- (익명, 첸나이, 컨설팅) “중앙정부의 재집권으로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져 산업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li> <li>- (K기관, 스타트업 지원) “여당의 정책기조가 산업중심, 특히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에 인도 전체 및 카르나타카 주의 여당 집권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li> <li>- (바이젠, 첸나이 소재, 스타트업) “초기 중앙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나 재집권에 따라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정부차원의 허브 개설, 컨택 포인트, 정부 차원 보증/자격증, 공신력 있는 기관, 개발파트너 선별 등 각종 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함”</li> </ul>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자라트 / 인도 구자라트 상공회의소) “구자라트는 Make in India, 세계 제조 허브화 등 인도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아마도 2019년 총선결과는 거의 모든 구자라트 소재 회사와 기업가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함.”</li> <li>- (라자스탄 / V社, 태양광 발전기업) “농촌을 중심으로 2014년 BJP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이며, 지난 해 주 정부 정권은 교체되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라자스탄주 기업가들은 BJP의 경제·산업 정책을 지지하고 모디 정부의 정책이 지속 추진되길 바라고 있음.”</li> <li>- (타밀나두 / 다스, 자동차부품) “타밀나두 주에서는 BJP와 제휴하지 않은 DMK가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DMK가 AIADMK보다는 친기업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li> <li>- (타밀나두 / 익명의 기업, 전력) “선거 결과는 기업운영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인도 경제는 코끼리와 같으며 집권정당 교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성장기조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스, 자동차부품) BJP가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모디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의 도입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반면 모디 정권의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이 예상됨.</li> <li>- (만도, 자동차부품)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과 불확실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운영에 안정적일 것으로 사료. 단, BJP가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만큼, 자동차 부품업계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li> </ul>

<p><b>전기전자</b></p>	<p>- (익명) 총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설비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총선이 종료됨에 따라 소비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생각됨. 인도 정부는 2021년 5G통신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른 통신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p>
<p><b>철 강</b></p>	<p>- (익명) 총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진행이 더뎠던 주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철강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총선으로 인해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차량 수요 확대에 따른 철강제품의 대인도 수출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다만, 인도정부의 자국산업 보호경향 강화는 애로 사항임.</p>
<p><b>화 학</b></p>	<p>- (한화케미칼) “현 정부가 BIS 등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산업을 보호하는 상황은 악재이나, Make in India 정책이 강화되어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p> <p>- (국도화학) “소재한 구자라트 지역은 친여당 성향으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 정책혼선 등으로 구자라트 주에 안착된 경제발전 노력과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음. 여당이 재집권함으로써 산업 및 인프라 개발, 외국인 투자확대 등 정부 주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 산업발전 및 외국기업 투자진출 확대에 긍정적 신호”</p>
<p><b>유 통</b></p>	<p>- (익명, 전자상거래) “집권여당이 집권 1기 동안 실시한 Digital India, BHIM-UPI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책은 전자상거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향후 온라인 결제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도 전자상거래가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p>
<p><b>금 용</b></p>	<p>- (산업은행) “5월 19일 출구조사 발표 이후 인도 주가지수가 근 10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는 등 현 정권의 재집권을 금융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임.”</p> <p>- (우리은행) “BJP의 재집권으로 정권이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국정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함. 기존의 투자유치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금융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p>
<p><b>KOTRA</b></p>	<p>- (암다바드 김문영 관장) “18년 4분기 이래 19년 정권교체 여부가 현지 정부, 기업,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지난 6개월간 주 정부 정책결정 및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가 지연되어 왔음. 현지기업의 투자계획, 소비자의 내구소비재 구매까지 이번 총선과 연계되며, 총선 전까지 행정, 경제활동 전반에서 불확실성과 정체국면이 지속되었다 볼 수 있음. 구자라트 기업의 절대 다수는 금번 총선을 향후 인도경제의 20년을 결정할 최대의 정치 모멘텀으로 평가”</p>

자료: KOTRA 인도지역 무역관 직접 인터뷰

## IV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1. 기회 및 위협요인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도 CEPA 개정예정.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의 완화와 양허품목 확대 기대</li> <li>• Make in India 정책지속,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 기대</li> <li>•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척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힌두 중심주의의 대두. 테러리즘의 확대 우려</li> <li>• 인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관세인상</li> <li>• 인도-파키스탄 국경분쟁 심화 가능성</li> <li>•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상승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정</li> </ul>

#### □ 모디정부 2기 기회요인

- 한-인도 CEPA 개선
  - 2018년 정상방인과 2019년 모디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또한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됨.
  - 철강, 화학 등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의 양허관세가 추가 인하되거나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이 완화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확대가 예상되며,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고도화 또한 기대됨.
- Make in India 2.0
  - 모디 총리의 재임에 따라 기존 제조업 진흥정책인 Make in India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기존 진출기업과 대인도 신규 진출기업의 수혜가 예상됨.
  - 기존 전기전자, 자동차 외에도 식품가공, 전기차, 바이오 등이 유망한 상황으로, 인도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
  - BJP는 공약집을 통해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EDCF 자금 활용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참가가 기대되는 상황임.
  - 노이다 공항, 구자라트 신공항 등 친BJP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진척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 모디정부 2기 위협요인

- 힌두중심주의의 강화와 종교간 갈등 확대
  - BJP는 공약집을 통해 동북부 7개 지방으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해 시민권 부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인도 하원에서 비회교도를 조건으로 넣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2002년 힌두교도의 무슬림 학살사건 등으로 모디 총리의 반무슬림 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Time지 논설(5월 2주)은 모디 총리를 Divider 라고 표현하며 힌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사회적 분열 가능성을 지적하였음.
- 인도정부의 보호주의 경향
  - 인도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모디 정부 2기를 맞이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분야에서 주요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진출기업에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
  - 양국은 3월 전투기를 동원한 국지적 분쟁을 겪었으며, 인도 정부의 강경 조치로 인도-파키스탄 국경지대에 긴장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BJP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지 무슬림 주민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미중 무역갈등, 미 금리 인상 및 유가상승
  - 세계경제가 하강기에 접어들고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인도가 지향하는 세계 제조업 허브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인도 중앙은행은 2019년 상반기 경기하방을 우려하여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였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중기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추후 금리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원유 수요의 70% 가량을 대외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는 고유가에 타격을 입는 국가이며, 2017년 이래 유가상승으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유가상승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 시사점

### □ 모디 정부 2기. 유망 산업분야는?

#### ○ (신규 유망) 유통소비재, 식품 등

- Amazon, Walmart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인도의 전자상거래 진출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시장의 품목다변화가 진행 중
  - \* 종합품목(Amazon, Flipkart) 이외, 화장품(Nykaa), 의류(Myntra) 등 특정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
- 모디정부는 지난 5년간 Digital India를 표방하며, 전자결제 플랫폼 확충, 전국민 계좌만들기 지원, 전국 광섬유망 설치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해왔음. 소비자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확산으로 인도 소비자들이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을 인지하기 시작하며 관련 품목의 수출이 크게 확대 중
  - \* 유망소비재 대인도 수출 (4월 누계, 전년동기비): 농수산물(6백만\$, 17.5%), 화장품(6백만\$, 79%), 생활용품(65백만\$, 21.7%), 의약품(11백만\$, 11%)
  - \* 특히 한국산 라면은 '18년 수출액 250만\$로 전년비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불닭볶음면 등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되며 인기를 끌고 있음.

#### ○ (기존 주력) 전기전자, 자동차, 인프라 등

- 인도정부의 Make in India와 2020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순수입 제로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대기업에 국한되었던 전기전자 부품, 소재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예상됨.
- 기아자동차가 8-9월부터 현지 차량판매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축소되어왔던 자동차부품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한국산 자동차의 현지생산이 100만대에 이르러, 관련 협력업체의 인도진출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BJP는 공약을 통해 도로, 공항, 항만 전 인프라 분야에서 대대적인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와 같이 친 여당 성향의 산업단지가 집적되어있는 지역을 위주로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 모디 정부 2기. 고려해야 할 사항

### ○ 내각 개편 및 부처 신설 (6월, 잠정)

- 모디 총리가 총리 재임선언을 한 뒤 일정 정도의 내각 개편이 예상되고 있음. 건강이 좋지 않은 재무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BJP 당수인 아미트 샤 등이 입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중점 육성 산업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여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식품가공업 진흥 등을 위해 관련 부처를 강화, 신설, 별도 예산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도농간 소득편차 심화, 농촌지역 경제발전 미진 등이 정부여당의 과오로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식품가공업 진흥, 의료시설 확충 등 농민 소득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 정부 예산안 발표 (7-8월, 잠정)

- 정부가 새로이 구성되면 기존의 예산안은 폐기되며 새로 구성된 하원의회의 회기를 통해 새로운 예산안이 발표됨.
  - \* 2월 발표된 예산안은 임시(Interim) 예산안으로 폐기되며, 17대 인도하원 첫 회기 (7-9월, 몬순 회기)에 새로운 예산안 제시 예상
- 여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에서 기존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 투명성 강화가 2기 정부 첫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에, 회사법 및 세법 개정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2017년 7월 통합간접세 제도 도입 이후 인도 정부가 직접세 세원 발굴을 위해 투명성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인도간 통상협상

-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도정부는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상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등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양국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긴밀한 안보,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인도정부가 추구하는 Make in India 정책과 함께 새로운 생산기지로서의 인도의 가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 서남아지역본부	박한수 본부장
◆ 서남아지역본부	임태형 부장
◆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 뭄바이 무역관	장진영 차장
◆ 첸나이 무역관	김태룡 과장
◆ 벵갈루루 무역관	조주연 차장
◆ 콜카타 무역관	박영선 관장
◆ 암다바드 무역관	김문영 관장
◆ 신남방팀	신용호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9-086

2019년 인도 총선결과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 의 처 | 신남방팀  
(02-3460-7669)

ISBN : 979-11-6097-992-3 (95320)

---

# Global Market Report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